

충남도 도시와 농촌간 복지격차 해소방안 및 '한농연' 문제제기에 대한 우리도 현황분석

김용현

충남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 책임연구원, kyhyun363@cn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복지 문제제기에 대하여 충남도 현황분석 및 접목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요 약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한농연)은 '농촌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 구축방안연구(2014)'이라는 보고서에서 복지시설부족, 서비스 접근성, 사재관리미흡, 지역역량부족 등, 농촌지역의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한농연'에서 제기한 농촌지역의 복지시스템 문제제기에 대하여 충남도 현황분석을 통하여 충남도 현실에 맞는 접목방안을 강구하는 것임
 - 충남도 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1개소도 없는 지역이 존재하고 군단위지역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부재가 심각함
 - 읍·면단위 중심 복지시스템 구축은 충남도 15개 시군에 '행복키움지원단'과 군 지역 80개/시지역 127개의 읍·면동에 '행복키움추진단'을 구축 완료하였음
 - 농촌지역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 이원화 및 광역 슈퍼바이저 배치는 현재로는 진행되고 있지않아 향후 검토가 요망됨
 - 농촌지역 서비스 인프라 구축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보호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존재하나 계속 확대할 여지가 있음
- 본 연구는 충남도 현황을 토대로 접목방안을 아래와같이 제시함
 - 읍·면에 '복지윈스탑센터'설립을 통한 ONE-STOP서비스 구현
 - 광역도 차원의 슈퍼바이저 배치를 통한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
 - 부족한 복지시설을 타개하기위해 기존복지시설의 다기능화
 - 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복지문제 해결

CONTENTS

< 요약 >

1. 문제제기
2. 충남도 현황분석
3. 충남도 접목방안
4. 결론 및 정책제언

● '농촌 지역사회기반(community-based) 복지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조미형 외,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는 전국 83개 군 단위지역별 복지수요 및 공급현황을 분석하고 농촌지역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농촌 지역사회복지 관련 국내외 문헌 고찰과 기초자치단위에서의 복지관련 통계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또한 농촌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통합사례관리사·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초집집단면접(FGI)3회, 전문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을 토대로 이 연구는 농촌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밝히는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 구축은 '농촌주민이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거주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전달체계'로 정의하고 있음(조미형 외,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3)

●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드러난 농촌지역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조미형 외,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32)

- 첫째, 농촌 지역사회복지 수요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군 지역의 경우 복지 수요계층은 많은 반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둘째,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

결되지 않거나 대상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도권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주민의 문제는 속제로 남음

- 셋째, 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제한된 서비스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포괄성의 문제가 있음
- 넷째,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사무소에서는 행정전달체계 안에서 기존의 행정업무와는 성격이 다른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데 고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섯째, 복지관에서는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있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의 체계가 미흡하여 서비스 통합이나 효율적 자원 활용이 되지 않고 있음 (조미형 외,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32)

● 상기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 있음

① 읍·면 단위 중심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을 1차 지원체계로 구축(조미형 외,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을 행정업무지원이 아닌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복지코디네이터와 지역사회로 들어가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사회복지활동가로 전환

② 시·군은 2차 지원체계 역할담당, 시·도나 중앙정부는 3차 지원체계로 구축(조미형 외,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간보호 등의 돌봄 기능이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되도록 지원, 치료·재활 등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차원이나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
- 중앙정부나 시·도 차원에서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고, 교육 및 슈퍼비전 등 역량 강화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지원을 별도의 독립적인 서비스로 인정

③ 농촌지역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 이원화 및 광역 슈퍼바이저 배치(조미형 외,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시·군 통합사례관리사: 서비스 연계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는 대상자 관리에 초점,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 지원을 서비스 제공 실적으로 인정하여 농촌 주민의 접근성 향상 기여
- 광역 슈퍼바이저(민간 전문가 채용): 시·군 차원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시·군 통합사례관리사와 협조하여 사례관리 진행

④ 농촌지역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방안 검토(조미형 외,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간보호서비스 확대를 통한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의 낮 시간 동안 돌봄 기능 강화(예: 보건진료소 생활공간을 주간보호시설로 전환)
- 농촌지역 사회복지시설의 다기능화 추진 방안 검토

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보호 강화 필요(조미형 외,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촌노인,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농업 부문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마을 단위의 공동급식, 공동 돌봄 등을 통한 공동체 강화

● 본 현안과제의 연구목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대한 충남도 현황분석(사실여부) 및 접목방안을 분석하는 것임

- 한농연의 연구결과는 전국 83개 시군에 대한 분석한 것임
- 따라서 본 현안과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지역의 복지시스템의 현황이 충남도 현실에 부합하는 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충남도 접목방안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임
- 병행하여 충남도의 도시와 농촌간의 복지격차 현황 분석을 분석하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본 현안과제의 목적임

충남도 현황분석 ◀

02

[1] 대상별 충남도 복지자원 현황

① 취약계층 (기초수급자+차상위+ 결혼이주여성) 관련

구분	인구수	취약계층						통합 사례관리 인원	주요 복지시설				관련예산 (국+도+시군) *백만원
		수급자	차상위	재가정신질환자	한부모가족	다문화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정거민요양보호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민 및 귀화자	가족 자녀						
계	2,060,971	53,288	43,680	8,327		13,460	11,863	50	17	14	15	14	184,088
시지역	1,605,486	37,897	28,655	5,077		9,692	8,619	29	16	7	8	7	130,716
천안	597,580	9,836	8,409	766		3,517	2,539	8	2	1	1	1	33,786
공주	114,109	4,295	2,970	524		775	808	3	3	1	1	1	13,988
보령	104,417	4,646	2,837	780		621	575	3	2	1	1	1	16,039
아산	293,660	6,343	5,133	875		2,242	1,644	4	5	1	1	1	22,454
서산	167,595	3,426	2,845	735		1,021	906	3	2	1	1	1	11,900
논산	124,817	6,624	3,607	714		867	922	3	1	1	1	1	22,823
계룡	40,672	396	853	110		100	91	2	-		1	-	1,434
당진	162,636	2,331	2,001	573		549	1,134	3	1	1	1	1	8,292
군지역	455,485	15,391	15,025	3,250		3,768	3,244	21	1	7	7	7	53,372
금산	55,165	1,995	2,548	382		562	656	3	-	1	1	1	7,159
부여	71,772	2,941	2,683	644		329	704	3	-	1	1	1	10,163
서천	57,790	2,542	2,396	440		263	256	3	-	1	1	1	8,194
청양	32,232	915	832	315		514	316	3	-	1	1	1	3,461
홍성	91,692	2,597	2,867	570		576	525	3	1	1	1	1	9,049
예산	84,419	2,615	1,956	567		318	492	3	-	1	1	1	9,034
태안	62,415	1,786	1,743	332		1,206	295	3	-	1	1	1	6,312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2015)

○ 사회복지시설의 도·농 격차는 편차가 큼. 특히 사회복지관의 경우 도시가 16개인 반면 군 지역은 단 1개로 격차가 너무도 심함. 복지자원뿐만 아니라 인구수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군 단위지역이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됨. 반면 인구 수 대비 재가정신질환자의 수도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이 월등히 많아 전반적으로 복지수요가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이 높으나 공급은 이에 따라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② 노인관련

구분	노인 인구	독거 노인	치매 노인	주요 복지시설					일자리		관련예산 (국+도+시군) *백만원
				경로당	행복 경로당	공동 생활체	복지관	재가 시설	공공일 자리수	시니어 클럽수	
계	330,807	99,069	16,997	5,575	175	28	13	110	14,245	4	96,990
시지역	212,705	61,886	11,358	3,223	98	13	8	74	8,305	3	62,270
천안	52,610	13,068	1,660	686	24	2	2	28	1,799		12,701
공주	23,092	7,196	1,260	408	3	3	1	3	1,107		9,881
보령	21,817	10,025	1,208	388	19	1	1	3	703		6,061
아산	32,581	8,082	1,398	508	17	1	1	6	852	1	10,411
서산	26,187	7,773	1,029	371	15	3		4	1,370	1	8,344
논산	26,997	8,244	1,470	508	15	1		11	618		5,790
계룡	3,446	731	204	34	2	1	1	6	541		2,700
당진	25,975	6,767	3,129	320	3	1	2	13	1,315	1	6,382
군지역	104,083	37,183	5,639	2,352	77	15	5	36	5,940	1	34,720
금산	14,019	6,857	857	322	11	6		7	884		4,314
부여	20,078	7,050	1,034	455	12	0		6	834	1	5,273
서천	17,192	5,342	955	325	13	1	1	9	1,001		5,698
청양	9,976	2,933	510	302	10	6	1	1	502		3,683
홍성	20,00	5,208	907	362	11		1	5	1,023		6,025

	6										
예산	21,036	5,439	900	361	12	1	1	5	613		4,198
태안	15,795	4,354	476	225	8	1	1	3	1,083		5,529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2015)

○ 노인관련 시설 수를 시 지역과 군 지역 수를 비교해 보면 노인복지관 수는 시 지역이 3개 많고 시니어클럽 수도 2개 많음을 알 수 있음. 재가시설 수도 군 지역보다는 시 지역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음. 시니어클럽 수 만큼 공공일자리의 수 역시 시 지역이 많음을 알 수 있음.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수는 군 지역이 다소 많음을 알 수 있음

③ 아동 관련

구분	아동 (0-5세)	주요 복지시설								관련예산 (국+도+시군) *백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시설				
		개소	정	현	비율 (%)	개소	정	현	비율 (%)	
계	117,484	225	6,777	6,255	92.3	35	1,132	726	64.1	62,601
시지역	100,723	163	4,684	4,365	91.1		644	446	62.3	41,885
천안	38,764	57	1,649	1,471	89.2	13	356	216	60.7	12,401
공주	4,467	9	230	208	90.4					2,943
보령	4,514	8	212	174	82.1	2	106	86	81.1	3,784
아산	23,723	40	1,329	1,236	93.0	6	79	60	75.9	8,437
서산	10,367	13	432	393	91.0	2	14	10	71.4	3,286
논산	5,127	22	714	694	97.2	3	245	128	52.2	7,091
계룡	2,486	3	77	66	85.7					1,142
당진	11,275	11	329	286	86.9	1	7	3	42.9	2,801

군지역	16,761	62	1,361	1,308	95.7		193	159	68.6	20,716
금산	2,183	16	444	419	94.4	3	132	64	48.5	4,575
부여	2,250	4	108	101	93.5	1	80	77	96.3	3,440
서천	1,819	13	435	417	95.9					2,887
청양	1,078	3	77	77	100.0					1,217
홍성	4,175	9	277	270	97.5	1	49	29	59.2	3,245
예산	2,983	10	301	292	97.0	2	57	46	80.7	3,419
태안	2,273	7	163	151	92.6	1	7	7	100.0	1,933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2015)

○ 아동관련복지시설을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시설로 나누어보면 인구 수 대비 지역아동센터는 군 지역이 도시지역을 약간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아동시설 역시 인구대비 시설 수는 군 지역이 도시 지역을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④ 장애인 관련

구분	장애인수	연금 수급자	주요 복지시설					일자리 지원 수	관련예산 (국+도+시군) *백만원
			생활 시설	이용시설					
				지역사회재 활시설	직업재활 시설	주간보호 시설	그외		
계	124,721	18,031	58	45	16	9	16	790	69,171
시지역	85,902	12,365	44	22	12	9	9	484	53,111
천안	23,941	2,963	10	5	2	5	1	103	9,158
공주	8,795	1,636	9	3	3	1	2	68	12,030
보령	8,490	1,329	4	5	2	1	1	68	10,598
아산	14,082	1,925	7	3	2	1	1	79	5,419

서산	9,092	1,270	5	3	3		1	48	8,049
논산	10,569	2,000	5	2		1	1	53	4,904
계룡	1,458	149					1	24	45
당진	9,475	1,093	4	3	1		1	41	2,908
군지역	38,819	5,666	14	21	4		7	306	16,060
금산	4,551	678	5	3	1		1	34	2,100
부여	7,146	1,145	1	3			1	49	1,488
서천	5,815	854	3	3	1		1	49	3,880
청양	3,005	394		3	1		1	19	998
홍성	6,609	987	3	3			1	50	2,493
예산	6,874	963	1	3			1	44	2,759
태안	4,819	645	1	3	1		1	61	2,342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2015)

- 장애인 복지관은 지역별로 1~2개씩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계룡시와 논산시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생활시설 수는 시 지역 44개이나 군 지역은 14개로 많은 편차를 보임을 알 수 있음. 주간보호시설은 시 지역은 9개나 되나 군 지역은 1개도 없어 농촌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단기시설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음

⑤ 충남도 도시와 농촌간의 복지격차 현황

구분	합계	저소득층 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여성 복지		이주민 관련 복지 시설
		생활	이용	생활	노인	생활	이용	보육 (국공립)	생활	생활	이용	생활	이용	
합계	525	1	51	179	12	25	75	51	38	7	23	5	38	20
충청남도	5	-	2	-	-	1	2	-	-	-	-	-	-	-
천안시	71	1	6	5	2	4	10	8	11	5	3	2	10	4
공주시	52	-	5	16	-	6	10	6	-	-	3	-	4	2
보령시	40	-	4	12	1	3	9	4	3	-	2	-	1	1
아산시	64	-	7	22	1	2	7	11	3	2	1	1	5	2
서산시	38	-	4	11	1	4	7	2	3	-	2	-	3	1
논산시	29	-	4	9	-	2	3	4	3	-	1	-	2	1
계룡시	16	-	-	10	1	-	-	1	-	-	1	1	2	-
금산군	29	-	2	10	1	1	4	4	4	-	1	-	1	1
부여군	24	-	3	14	-	-	3	-	1	-	2	-	-	1
서천군	28	-	2	14	1	2	3	2	-	-	1	1	1	1
청양군	25	-	2	13	-	-	3	3	-	-	1	-	2	1
홍성군	46	-	4	25	1	-	5	4	1	-	2	-	2	2
예산군	17	-	2	5	1	-	3	1	2	-	1	-	1	1
태안군	19	-	2	6	1	-	3	1	2	-	1	-	2	1
당진군	22	-	2	7	1	-	3	-	5	-	1	-	2	1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2015)

- 지역복지전달체계의 핵심단위인 복지인프라의 규모는 해당 지역사회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임(충청남도 원탁회의를 통한 복지공동체 만들기 자료, 2013. p.87)
- 지역복지재정의 상당액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인 점을 고려하면 결국 복지시설의 차이가 지역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 상기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남도의 15개 시군별 사회복지시설현황을 보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역간 복지시설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충남도에서 복지를 논의할 때 두드러진 현상은 도·농간 복지 격차의 확대임

- 대기업의 대규모 산업기지가 즐비한 서부-북부축에 반하여 중부내륙 및 서해안 축은 1차 산업 중심으로 발전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
- 산업구조의 불균등 발전은 시설, 예산지원, 사회서비스 등의 복지영역에서도 많은 격차를 낳고 있음
- 천안시, 당진시, 청양군, 부여군의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여주는 상기의 표는 각 시·군의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청양이나 부여군의 시설수가 현저히 낮음을 보여주고 있음
-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도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존재함 (김용현, 충남복지의 미래와 당면과제, 열린충남65호, 2013)

<표1: 2013년 충남 재정자립도>

광역	구/시·군 평균	최저	최고
29.4%	26.2%	11.3%(부여군)	46.6%(천안시)

자료 : 충청투데이, 2013년 10월 31일자

- 거시적으로 도·농간 복지 격차 해소는 거시적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김용현, 충남복지의 미래와 당면과제, 열린충남65호, 2013)

[2] ‘한농연’ 농촌복지시스템 구축방안 제언에 대한 충남도 현황분석

❶ 읍·면 단위 중심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을 1차 지원체제로 구축(조미형 외,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충남도는 15개 시·군에 「행복키움지원단과 군지역 80개/시지역 127개의 읍·면·동에는 「행복키움추진단을 구축 완료 하였음(’12. 4월)

- 이에 시군(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은 경제적·의료·정신적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첫째,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을 행정업무지원이 아닌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복지코디네이터’에 대해 현황분석은 다음과 같음

- 오늘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의 핵심 기능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임. 현재의 추세는 읍면·동사무소에 남아 있는 복지 외 업무를 모두 줄이고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김태일,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2015, p.265)

- 서울 서대문구 사례는 이 같은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음

- 2013년 기준 서대문구 복지 대상자는 서대문구 전체 인구의 약 15%, 약 6만 명이임 서대문구 공무원은 1133명이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그중 4.5%인 51명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전달체계개편 우수사례 매뉴얼, 2013)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한 명당 대상자가 천 명이 넘고 있음.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숫자임

- 우리나라는 공무원 규모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상당히 작음. 특히 복지분야는 훨씬 심함

- 복지예산 비중도 OECD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작은 규모이지만 복지담당 공무원 규모는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함. 복지담당 공무원 규모는 10분의 1에도 못 미침

- 가장 큰 이유는 외국과는 달리 보육이나 요양 돌봄 서비스를 대부분 민간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 하지만 대상자 선정 등 복지서비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규모도 외국에 비하면 매우 적음

-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대문구에서는 복지담당 일선 기관인 동주민센터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일반 민원업무를 축소했음
- 축소된 업무는 청소와 불법 주정차 단속, 민방위 같은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했음. 주민자치센터 업무는 주민에게 위임하고 각종증명서 발급은 무인발급기로 대체, 줄어든 업무로 손이 비는 공무원을 사회복지 업무로 재배치시킴
- 또 통장과 반장을 '복지도무미' 로 활용함. 통·반장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복지대상자 발굴과 지역 복지사업 관리 지원을 맡김. 이렇게 해도 부족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은 새로 충원함
- 방문간호사나 노동 등 전문분야 상담가가 주민센터에 배치됨. 이렇게 업무와 인력을 개편해 서대문구의 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의 '복지허브'로 탈바꿈됨
- 동장의 명칭도 '복지동장'이 됨. 서대문구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 동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중심으로 목하 전국의 동주민센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충남도에서도 복지전달체계 개편방향에 따라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을 행정업무는 최소화하고 주민 민원이나 응대 등의 복지업무를 맡도록 사무기능을 조정한 바 있으며('14. 1월~12월)
- 또, 윈스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역량이 뛰어난 사회복지직공무원(6~7급)을 '복지코디네이터' 로 기 지정·배치하였음 (읍면사무소 161개/ 동주민센터 46개)

○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지역사회복지활동가로 전환에 대한 현황분석은 다음과 같음

- 지역 내 주민과 소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충남도는 읍면동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을 기 추진('14.8월)하고 있으며, 읍면동장(직원)및 지역주민으로 구성 하였음(총3,770명:공무원 395, 지역주민 3,375)
- 앞으로도 복지코디네이터 교육 강화 및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지역사회복지활동가 역할 수행 등 지원체계 구축 지속 추진할 예정임

○ 사회복지공무원의 지역사회복지활동가로의 전환은 구조적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최근 일선 지자체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잇달아 자살하는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것이 현실임
-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복지 업무의 '깎때기 현상', 즉 중앙부처에서 갖가지 복지사업을 만들어내면 결국 이것들이 읍면동 일선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했을 만큼 이들의 업무가 많음
- 통상 복지담당 공무원이 두 명이 100여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 1인당 복지 대상자는 약 1500명임. 따라서 나서서 복지수요자를 발굴하는 것은 고사하고 들어오는 신청을 처리하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임
- 중앙정부도 일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증원을 기 추진함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천 명을 증원해서 현재 약 2만 7천 명 수준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복지공무원 수가 모자라 2016년 까지 6천명을 더 증원할 예정이나 이 숫자도 수요에 비하면 모자란 것이 현실임

② 시·군은 2차 지원체계 역할담당, 시·도나 중앙정부는 3차 지원체계로 구축 (조미형 외,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생활보장, 아동복지>

- 읍면을 1차 지원체계로 볼 때 시군은 2차 지원체계로 역할 담당과 사도(중앙)는 3차 지원체계로 작동하는 것으로 추진(조미형 외,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농연'의 연구처럼통합사례관리에서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서비스 연계를 통해 해결하고 일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만 전문적 서비스가 지원되지 못하여 문제가 반복되는 대상자 등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조미형 외,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첫째, 치료·재활 등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광역 차원이나 인근도시지역과 연계에 대한 충남도 현황은 다음과 같음(조미형 외,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충남도에서는 「행복키움지원단, 추진단」 을 도-시군-읍면동 지원체계를 기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지역과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중임
 - 공공자원 및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자원을 적극 개발을 위한 자원 개발 전소조사 2회에 5,923개를 자원 발굴하고 시군간 정보를 공유시킨 바 있음
- 둘째, 중앙정부나 시도 차원에서 제도나 정책 개선하고, 교육 및 슈퍼비전 등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한 충남도 현황은 다음과 같음(조미형 외,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시군 행복키움지원단에 매년 운영비를 325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성 향상 및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및 슈퍼비전(컨설팅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년4회이상/260명)
- 셋째,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지원을 별도의 독립적인 서비스로 인정에 대해 분석
 - 행복키움지원단의 운영체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통합사례관리사교육 및 슈퍼비전 등 역량 강화 기회 확대 추진
-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구축운영 추진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희망하는 돌봄서비스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희망 아동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초등돌봄교실 운영 :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돌봄 지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 : 18세 미만 아동이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지원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③ 농촌지역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 이원화 및 광역 슈퍼바이저 배치(조미형 외,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시·군 통합사례관리사 : 서비스 연계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는 대상자 관리에 초점,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 지원을 서비스 제공 실적으로 인정하여 농촌 주민의 접근성 향상 기여
 - 광역 슈퍼바이저(민간 전문가 채용) : 시·군 차원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시·군 통합사례관리사와 협조하여 사례관리 진행

<생활보장>

- 통합사례관리사는 복지·보건·고용·교육 등 8대분야의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통합사례관리사는 도내에 50명(군 21/시 29)이 배치되어 있고 「시군 행복키움지원단」 에서 통합사례관리를 맡고 있음
- 농촌지역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 이원화에 대한 충남도 현황분석
 - 농촌지역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 이원화-이동지원을 업무실적으로 인정 하자는 제언은 장기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임
 - 현행 시군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읍·면·동지역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구분 없이 접수한 순서에 의해 사례배정 등 담당하고 있음
- 광역 슈퍼바이저 배치에 대한 충남도 현황분석
 - 통합사례관리사의 슈퍼바이저 역할을 부여하고 문제가 심각한 사례의 경우 지역 통합사례관리사와 함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를 광역 차원에서 구축하는 것은 필요성 및 기존 통합사례관리사와의 관계정립, 예산 등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검토 필요

⇒ 농촌지역의 통합사례관리사 역할 이원화 및 道 차원에서 민간전문가 (슈퍼바이저) 배치 등 장기과제로 선정 추진

● 충남도 행복키움지원단의 문제

○ 희망복지지원단 : 통합사례관리의 문제점

- 대상자 선정의 문제를 예를 들면,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송파 세 모녀'는 실제 수급 신청을 하지는 않음. 그러나 신청을 했더라도 자격미달로 탈락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임. 이른바 '봉고차 모녀'는 실제 신청했으나 탈락했음. 일부 언론에서는 '송파 세 모녀'의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될 수 없었어도 긴급복지 혜택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으나 전문가들은 긴급복지 역시 실제 운영은 엄격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함

- 또 긴급복지 대부분 신청할 경우 선별해서 주는 것이지 '송파 세 모녀'처럼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구청이 스스로 힘든 형편을 알아내고 지원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함(김태일,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2014)

- 따라서 복지현장에서는 이른바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

- 행복키움지원단의 물이해는 사회복지행정의 혁신 조직으로서 탄생한 행복키움지원단이 사회복지 조직 내에서조차도 이름에 걸맞은 온전한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임

○ 서비스 연계의 문제

- 알콜 및 정신질환 대상자에 관한 전문인력 및 연계기관의 부재와 서비스 의뢰의 경우 대부분 공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조직적 차원에서 연계의 걸림돌로 분석되고 있음 (김용현, 충청남도 행복키움지원단 활성화 방안 연구, 2014)

- 뿐만아니라,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는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는 서비스 대상자가 가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자원을 연계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따라서 연계자원의 유무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제공 양상 및 질이 달라짐

- 충남도의 경우, 도시지역은 그런대로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하나 농촌지역은 이렇다 할 자원이 없는 실정임

- 주로 부족한 시설자원을 찾아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시군도 있음.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향후 지역 자원을 개발해야하는 숙제도 안고 있음

○ 충남도 현황연계관련 사항

- 경우에 따라서는 행복키움지원단과 유관기관 사이에 인력의 교차 지원도 행해지고 있음

-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적재적소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계 대상기관에게 협조의 정도에 따라 점수제를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김용현, 행복키움지원단활성화 방안 연구, p.43)

④ 농촌지역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방안 검토(조미형 외,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간보호서비스 확대를 통한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의 낮 시간 동안 돌봄 기능 강화(예: 보건진료소 생활공간을 주간보호시설로 전환)
-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외국인 농업 노동자 등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방안

<아동복지>

○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 지원

- 부처별(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각각 운영중인 방과후 돌봄사업을 시·군 지역돌봄 운영협의회를 통해 긴밀한 연계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노인시설 분야>

<현 황>

○ 전국노인 인구비율 12.70%(전남, 경북, 전북, 강원, 충남 順)보다 충남도 노인인구 330,807명(16.04%)이 높고, 독거노인 99,069명(29.94%)임

- 주야간 보호서비스 : 15개 시·군 104개소 임

<문 제 점>

-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시설보호의 한계
- 대상자들이 시설보다 가정에서 독립적인 서비스 희망
- 주간보호시설에서는 기관에 부설하는 형태가 많아서 전담인력 보다는 겸직인력의

활용도가 높아 적극성 및 책임감이 낮아 서비스 질 저하

<개선방안>

- 주간보호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치료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어 예방적, 재활적 접근을 위한 서비스 개발 필요
-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 노인 주간보호 사업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조직의 연계와 체계화된 연구개발 필요

<노인치매 분야>

○ 도내 재가치매노인 대상 주간보호소 운영(7개소 *시 4, 군 3)

- 특히, 맞벌이 및 생계로 돌보기 어려운 치매노인 우선 지원

- 급식 등 기본활동과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삶의 질 개선

⇒ 향후 도내 전 시·군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 보건진료소 생활공간 주간보호시설로 전환

- 보건진료소는 116㎡~149㎡ 규모에 진료실과 최소 주거공간만 배치

- 1인(보건진료전담공무원) 근무,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진료 및 보건사업 수행

※ 1일 평균 진료 15명, 건강상담 7명, 방문진료 주2회

⇒ 한정된 공간에서 최소한의 주민진료를 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주간보호서비스 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개선방안>

- 마을별 경로당 또는 별도의 인력과 공간을 활용 서비스제공
- 마을별 경로당 활용 돌봄(노인, 장애인, 아동) 기능강화
- 1일 도우미 2명(마을 1, 자원봉사 1), 식대료 등 행정지원
- 동네 복지에 필요한 복지수요 조사 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다문화 분야>

-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
 - 도내 14개 센터에 통·번역 지원사 19명(군지역 7명)을 배치하여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 (통역, 번역, 정보제공 등)
 - 국내거주 이주여성·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한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운영

<장애인 분야>

- 농어촌 지역복지의료시설(복지관, 청소년회관, 보건진료소 등) 중 주간여유공간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이 용이한 재가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전환 바람직
- 다만, 장애인의 경우 단순히 돌봄서비스만 제공하는 시설전환은 기존 생활시설과 차별화 전략이 없을 경우 장애인 이용한계 예상

○ 따라서 돌봄서비스 이외 재활프로그램서비스가 병행 필요 즉, 공간제공과 함께 운영주체의 전문성 또는 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등) 및 시설기준 설비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별도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시군별 지역사회 주간보호서비스 수요예측을 통한 유휴공간의 적절한 시설전환 방안 강구 바람직(시장·군수 의지)

○ 향후 전환시설에 대한 시설운영 근거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과 보건복지부 시설운영 지침에 준해 장애인복지시설의운영주체에 대한 직영 또는 위·수탁 운영여부, 지도감독체계가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해야 할 것임

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보호 강화 필요(조미형 외,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노인 분야>

○ 노인일자리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시니어클럽, 고령자친화기업으로 구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복지와 공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독거노인 안부확인, 복지시설 봉사활동, 거리환경조성, 숲 및 문화재 해설 등

[’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현황]

구분		주요사업내용	참여인원	비율	지원금액
합계			14,307	100	
공 분 민 간	복 지 형	노노케어(전국형), 복지시설 돌봄 등	4,496	31.4	월 20만원 이내
	공 익 형	거리환경조성, 급식도우미 등	7,523	52.6	
	교 육 형	강사과건, 문화재해설	1,215	8.5	
기 타		인력과건, 제조판매형	1,073	7.5	수요처기준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2015)

* 14,300여명 참여, 월 30~35시간 활동(9~12개월) 시 20만원 이내의 활동비 지원

▶ 농촌노인을 위한 농업부분에서의 사회적 일자리는 전무

(시니어클럽) 공동작업 및 제조판매형 등 시장진입형으로 콩나물제조판매, 영농로컬푸드, 두부제조, 쇼팽백제작, 목공예 등 수익성과 노인들의 경험을 활용한 사업

[시니어클럽 운영현황]

구분 (설치연도)	직원	사업내용	참여자	운영비 지원	비고
계	14		193		
아산('08)	5	영농로컬푸드 등 4개사업	96	180,000	월 평균 20~30만원
서산('10)	5	두부 제조 등 6개사업	103	180,000	
당진('14)	5	두부제조 등 2개사업('15년)	38	150,000	
부여('05)	4	쇼팽백 제작 등 3개사업	95	150,000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2015)

▶ 농촌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나 콩나물제조, 두부판매 등 농업과 관련된 일자리 수행

(고령자친화기업)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성격으로 수익성을 기본으로 한 사업으로 세탁사업, 모시떡, 폐합성수지 재활용사업, 원예전문 등 다양하며 월 평균 40~60만원의 소득확보 가능

[고령자친화기업 현황]

기업명	사업내용	소재지	지정연도	참여자 ('14년)	
				전체	60세↑
6개소				91명	70명
(주)자원과사람	폐합성수지 재활용사업	천안	2013년	18명	15명
(주)새하얀크린세탁	세탁사업	아산	2013년	37명	25명
(주)청정콩나물	콩나물 제조판매	아산	2013년	11명	10명
(주)청정드라이크리닝	세탁사업	아산	2014년	10명	10명
(주)고수육식품	모시떡, 장아치, 것갈 판매 등	서천	2014년	5명	2명 (준비중)
(주)리아프	원예전문 판매 (식당, 카페운영)	아산	2014년	10명	8명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2015)

※ 고령자친화기업이란 60세이상 고령자를 70%이상 고용하는 기업으로 복지부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최대 3억원까지 지원가능

▶ 60세 이상 노인의 70%이상 참여를 조건으로 복지부에서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콩나물제조, 모시떡, 원예전문 판매 등 농업을 기반

□ 충남도 현황 및 개선방안

○ 시니어클럽, 고령자 친화기업 등 민간영역에서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활동에 있어 농업관련 일자리 사업이 전개 되는 바, 시니어클럽 및 고령자친화기업을 매년 확대 추진

※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 연계 추진 : 고령자친화기업 육성 및 시니어클럽 확대 등

<장애인 분야>

○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황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 : 4개 분야, 752명
- 일반형, 복지형,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도 자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 16개 시설, 540명
- 피복, 화훼, 인쇄, 제과·제빵, 종이상자, 복사용지 등 22개 품목 생산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농업부문 사회적 일자리는 없음

○ 주요 문제점

-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여건 성숙이 선결과제
- 농촌고령화로 영농기술을 헌신적으로 지도할 젊은 영농인 부재
- 일자리제공, 생산품판매, 생활지도를 전담할 전문단체 확보 문제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포함여부 불분명
- 포함이 안 될 경우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로 운영해야 하는 문제 발생

○ 유사 운영사례

- 사업명: social farming 구축사업 '행복농장'/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소재
 - 운영주체 :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예산지원 : 2014-2016년까지 매년 15백만원 ※ 공동모금회에서 지원
 - 입소대상 : 도내 정신장애인, 4박5일 과정
 - 운영방식 : 비닐하우스 2동 임차(채소 재배)
-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2015)

○ 향후계획

- 현재 정신장애인 대상으로 운영중인 『행복농장』 사업 확대 검토
-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인으로 참여 확대 및 예산 지원
- 현재 체험위주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방안 검토 등
- 이 외에 실현가능 지역 모색, 해당 시군 협의 등 실현가능성 타진

▷ 보건복지부와 협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의 지정추진(국비확보)

- 첫째, 읍면 단위를 중심으로 한 지역기반 복지시스템을 1차 지원체계로 구축함(시·군은 2차, 시도 및 중앙은 3차)

○ 단기적 방안

- 통·이장 설치조례를 복지업무 중심으로 개정하여 통장과 이장으로 하여금 복지 대상자 발굴과 지역 복지 관리 지원을 담당하게 함
- 읍·면사무소를 복지허브화하여 읍·면사무소가 하던 전통적인 민원업무를 최소화하고 복지업무가 핵심이 되도록 구조조정

○ 장기적 방안

- 읍·면에 '복지 원스탑 센터'를 설립하여 민·관 사회복지서비스 초기상담 및 연계창구 역할 수행으로 원스탑(ONE-STOP)서비스 구현 및 고용, 보건 등 사회서비스 전반 업무에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농촌 주민의 접근성 제고
- '복지 원스탑 센터'는 프랑스의 경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시·군청과별도로 준공공기관인(para-publique)CCAS(Centre Communal d'Action Social : 사회서비스 시군 센터/ 사회부조국을 1986년부터 대체함)를 설립하여 고용, 저소득층 지원, 노인돌봄, 장애인 수당 등 복지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총괄하고 있음. 영국은 1996년까지는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Jobcentre와 실업급여, 장애급여, 공공부조 등을 담당하는

Benefit office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근로연계복지를 추구하면서 Jobcentre Plus를 중심으로 사회보장급여와 고용을 연계하는 통합적인 맞춤형서비스를 2001년에 도입함

● 둘째,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 이원화 및 ‘광역 슈퍼바이저 배치’

○ 단기적 방안

- 읍면지역은 고령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기초수급·차상위계층 가구의 상당수가 65세이상 노인비율(청양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수급자비율이 258명으로 전체수급자 697명중 37%임)이 높음. 따라서 읍면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방문건강관리인력을 행복키움지원담당으로 함께 지정하여, 사회복지공무원과 방문건강관리인력을 중심으로 협력하도록 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복지재단,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2008)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의 행복키움지원단 상근 추진

○ 장기적 방안

- 충남도는 광역단위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 시·군 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체계를 연계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으므로 광역단위 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은 복지거버넌스를 실현하고 복지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음
- 충남도 차원의 광역전달체계 구축으로 기초지자체의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광역도 차원의 슈퍼바이저를 배치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제가 심각한 사례의 경우 지역 통합사례관리사와 함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를 광역차원에서 구축
- 광역도 차원의 슈퍼바이저는 시·군의 통합사례관리사의 개입이 어려운 정신건강, 알코올중독, 치매 등과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개입하여 복잡한 복지수요자의 사례관리를 심화할 수 있음

● 셋째, 농촌지역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방안 검토

○ 단기적 방안

-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만 복지예산을 고려할 때 보다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방안은 현재 운영중인 복지시설을 다기능화 하는 것임. 기존 시설들의 지역사회의 수요 및 공급 상황을 반영하여 다기능화 할 있도록 유도
- 지역의 부족한 서비스 공급을 위한 복지시설의 다기능화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정시설에 대한 기능 대체 시설이 지정되어야 함. 농촌의 경우 현재 설치된 시설유형이 크게 부족하므로 기능 대체 시설유형을 1차와 2차로 구분함(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복지재단,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2008)

○ 장기적 방안

- 농촌의 경우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기 쉬우며 사회복지시설의 분포 형태도 고려해야 함
- 농촌의 부족한 복지시설 분포를 반영하여 신규 시설 확충은 종합서비스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여 지역사회 내의 거점 역할을 수행함과 더불어 필요한 전문서비스를 함께 공급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복지재단,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2008)

결론 및 정책제언 ◀

<표3> 농촌지역 기능 시설 대체 유형

구 분	시설 유형	기능 대체 유형 시설	
		1차	2차
지역주민/가족	종합사회복지관	가족지원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가족지원시설	종합사회복지관	-
노숙인	노숙인상담지원시설	종합사회복지관	-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종합지원시설	종합사회복지관	가족지원시설
	아동청소년활동시설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가족지원시설
	아동청소년일시보호시설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가족지원시설
노인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방문요양서비스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주·야간 보호서비스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단기보호서비스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
고용	지역자활센터	종합사회복지관	-
보건	정신보건시설	정신재활시설	-
	정신재활시설	정신보건시설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복지재단,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 2008, p. 88

- 모선회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도시와 농촌의 구분 없이 실시되어 왔는데, 농촌지역보다는 도 중심으로 시설이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것이 현실임 (고령사회의 밝은미래, 2007, p.324)
- 농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환경이 열악한 현실이며 인적·물적 자원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노인복지모델이 연구되고 개발·운영되어야 함
- 농촌지역에서는 노인을 위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이 아니라 생활과 이용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임
- 농촌지역에서 시범으로 시작한 주거, 의료, 여가시설을 포함한 복합노인 주거단지(김제시 등 운영)는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까운 몇 개의 면단위의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 소규모의 생활·이용 복합형 시설이 필요함
- 현재의 노인복지관 기능과 노인재가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 주간 및 단기보호) 노인양로·요양시설을 병행하는 것임
- 청장년층이 이탈하고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농촌지역에서 지역사회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준비되어야 함 (고령사회의 밝은미래, 2007, p.269)
- 안전의 보장

- 2차적 고령사회임 따라서 이러한 고령사회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보장시스템과 활동적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삶의 안전함을 강화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됨
-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의료 네트워크와 시설안전 네트워크가 갖추어져야 함
- 장수지역이 대부분 교통이 불편한 오지이며 고령자들의 출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의료지원체계의 확립은 매우 중요함
- 보건의료 네트워크는 인근 보건소를 중심으로 건강검진, 응급처치, 간호, 개호, 호스피스, 재활치료 등을 위한 전문가 또는 종사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함
- 특히 응급체계망을 확보하고 대학병원급의 대형병원과의 후송체계를 갖추으로써 의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여야 함
- 아울러 Telemedicine개념을 도입한 의료체계를 운용하여 환자와 의사의 접근을 보다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문화의 증축

- 농촌지역의 거주민들은 주로 노인층으로 갈수록 젊은이들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마련임. 따라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각종 문화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자살예방차원에서 기획된 충남도의 '생명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는 노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
- 아울러, 지역이 갖는 고유한 전통을 문화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대외적 관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생산성 시스템 구축

- 노인층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생산시스템에 참여하여야 함. 건강한 노인이 주도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한 향유적 삶이 아니라 생산적 삶을 추구해야 함
- 충남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니어클럽, 고령자친화기업을 내실 있게 수행함은 건강한 시니어를 발굴하여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참고 자료 ◆

- 김용현, 행복키움 지원단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2014
- 김용현, 충남복지의 미래와 당면과제, 열린충남65호, 2013
- 조미형·박대식·남승희, 농촌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내부자료, 2015
- 충청남도 원탁회의를 통한 복지공동체 만들기 자료, 201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전달체계개편 우수사례 매뉴얼, 201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복지재단,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 2008
- 한국노인과학술단체연합회편, 고령사회의 밝은 미래. 아카넷, 2007
- 충청투데이, 2013년10월31일자, “도시와 농촌의 복지격차”

